

도쿄올림픽 日 독도 영토표기 삭제하라

합동 WEA연구위, 1차 공청회 개최

세기총 우려표명... 대한민국 정부, 강력대응 나서야 해

문병호 교수 "일절 WEA와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에 점을 찍어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도쿄올림픽 지도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삭제할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일본이 독도를 지배한 기간은 1904년 러일전쟁 중에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강제로 편입하고 1910년 한일 강제 합의로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했던 40여 년뿐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이어왔다.

특히 일본의 독도 표기는 도쿄올림픽을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홍보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아욕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이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을 자국의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이 독도를 향한 아욕에 대해 '묵인'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문제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

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독도를 자신들의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행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단초가 될 것이다.

한·일 관계의 얽힌 매듭을 푸는 첫걸음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표기 삭제와 더불어 외교정서 및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체의 문구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시 '올림픽 정신'을 흔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어떠한 정치적 선전도 허용선 안된다는 IOC 권고에 따라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던 전례가 있었다. 당시 일본의 항의에 의한 독도 지도 삭제는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나 평화적 올림픽 개최라는 IOC의 권고에 의해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때 쓰일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운 바 있다.

평창 올림픽 당시에는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던 IOC가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라는 점에서 IOC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 축제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선 안된다는 뜻을 밝혔던 IOC가 더 이상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함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독도 표기를 바라보며 일본 정부가 진정 지난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웃나라와 함께 선린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동은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기독교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에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일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독도를 삭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임을 전명한다.

이에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일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독도를 삭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임을 전명한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인 합동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WE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해 WEA연구위원회(위원장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는 지난 6월 8일(목) 총회회관에서 1차 수도권 지역 공청회를 열고 "WEA는 신학과 구성원과 활동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병호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는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WEA와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란 발제를 통해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활동을 비판하면서 WCC에 편승하며 로마 가톨릭과 신학적 일치 추구를 추구하는, 혼합주의, 다원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근본 가치에서 멀어졌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우드브리지 신복음주의(WEA)들은 그릇되고 구복음주의자들이 옳다고 말했다"면서 "신복음주의를 위한 변증가를 지칭한 에드워드 케넬은 동성녀 탄생의 교리적 중요성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 무오, 권위를 입에 담으면서도 정작 개별교리 항목에 대한 탐과 거짓을 말해야 할 때에는 뚜렷한 판단을 유보하고, '복음화'의 의미를 내세워 '신학적' 타협을 시도한다"며 "그들은 성경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진리를 서술한 교리에 대한 변증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지 않으며, 이 같은 점에서 그들은 정통주의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 교수는 "모전회의 이후 신복음주의자와 로마 가톨릭 신학자들의 신학적 소통이 이루어졌다"며 "당시 보고서 12가지는 로마가톨릭의 교리로서 모두 비성경적이며 비정통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WEA(WEF) 신학위원회와 로마 가톨릭 PCPCU의 베니스 모임(1983년)을 소개하면서 정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WEA(WEF) 신학자들의 입장은 WCC의 에큐메니칼 해석과 많이 달랐다고 했다.

그는 성경과 전통에 대한 그 당위까지 내세우는 WEA(WEF) 신학자들 도이 점에 있어 WCC-로마 가톨릭의 선성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WEA와 제집일제교회 공동성명(2007년)은 WEA 복음주의자들의 신학적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단체 2006년 8월과 2007년 8월에 두 차례 모임에서 '신학적 대화'를 한 후에 공동 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WEA는 로마 가톨릭 교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합리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과 WEA는 로마 가톨릭과 WCC와 함께 에큐메니칼 신학과 활동을 지향하며 종교개혁의 고유한 가치를 버렸다는 점, WEA는 복음이 결여된 복음화를 꾀하며 복음주의적 가톨릭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WEA는 신복음주의의 포용성, 혼합성, 다원성은 신자유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WEA의 비성경적 반 기독교적 중립주의와 절충주의라는 점에서 일절 교류, 협력, 가입을 금해야 한다고 했다.



논평 - 설총나비

정부는 자유민주 수호 위해 목숨바친 장병의 정신을 기리고 분명히 지켜나가야 한다

지난 5월 30일~31일 1박2일로 개최된 인터넷과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이 서울 아닌 평양으로 나타나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아 교체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하여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든 평양이든 어떤가"라고 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가 정체성의식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자유민주국인 으로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들어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금 각성하게 한다. 북한의 6.25 남침에 맞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장병들의 희생과 애국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를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코로나 19의 위험 속에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는 모든 의료진과 국군장병, 공무원, 과학자, 그리고 일상에서 방역을 위해 불편을 감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 시대의 영웅임을 밝힌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96세 전쟁 영웅의 명예훈장 수여식이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과 맞서 싸운 펠트 파켓 주니어 중위였다. 백악관이 훈장을 수여하는 자리에 한국 정상을 참석시킨 것은 처음이다.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확인하며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각인시킨 시간이었다. 삼훈배는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1.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조선인민공화국과 혼동한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 해프닝과 청와대의 해명은 심히 우려된다.

지난 5월 30일~31일 1박2일로 개최된 인터넷과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P4G 서울 정상 회의' 개막식 영상이 서울 아닌 평양 위성사진이 들어가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동강 능라도를 시작으로 평양, 평안도, 한반도 순으로 좁아져가는 영상이다. 평양을 게

최지로 둔갑시킨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외주 제작사의 의도치 않은 단순 실수'라며 "그것이 왜 흠이 될까 싶다"고 했다. 이어 "P4G는 전 지구적, 인류적 목표를 다루는 회의인데 서울이든 평양이든 어떤가"라고 했다. 북한이 상호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중립주의 정책은 이제 서울이 주도하는 국제회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포기 기만극과 개성 남북협력사무소 폭파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남한 공산화 통일전략을 전혀 바꾸지 않는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중립주의 태도는 현충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현충일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흐려놓는 정부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우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뜻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소망한다. 북한은 우리의 동포이면서 또한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적인 주적(主敵)이라는 이중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북한 동포는 우리의 민족이나 북한 정권은 우리의 주적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정권이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울의 청와대를 평양의 능라도로 이동시키는 것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남북의 정치체제가 다른 가운데 현실적으로 남북 통일에는 매우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에 반해 4·7 보결선거로 당선 되어 새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10년 만에 다시 맡은 서울 시장은 아주 대조적이다. 현충일을 이틀 앞둔 6월 4일 서울 중구 서울 도서관 '꿈새김관'에 6.25전쟁 생존 용사 131명의 흑백사진과 '마지막 한 분까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렸다. 바림직한 행적이다.

3. 국가유공자들과 자녀들을 위한 보훈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먼저 올해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 국가는 제도적으로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정비되도록 해야 한다. 일본 강점기 속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삶을 꿈꾸며 이듬조자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무명의 독립운동가들, 6.25의 남침 속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이름 모를 산악에서 쓰러져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공산군의 기습남침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UN의 이름으로 낯선 땅에 와 목숨을 잃은 UN 장병들, 그리고 남북대치 상황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거이 자신의 몸을 던진 대한민국의 모든 병사들에게 국가는 그분들의 애국과 헌신을 영원히 예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와 그들의 후손들을 충분히 예우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확신 속에 국가를 위한 애국심을 불태울 것이다. 다시 한 번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분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며, 그분들의 유가족분들에게도 최고의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4. 문재인 대통령은 6·25 기념식과 사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여하여 그들의 애국정신을 기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25 기념식 당일 행사와 현충일과 연평도 전사자 등을 기리는 서해수호의날 행사에 불참하고 있다. 2010년 11월 23일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분단 이후 북한이 우리 땅 민간인 거주 지역을 타격한 최초의 사건으로 민간인 2명과 우리 병사 2명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범한 사건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연평도 전사자를 기리는 서해안 행사에도 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나 엄중한 경고 한마디 없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또한 현안 합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함이 조선 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으로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으며,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국가원수의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다.

5. 6·25전쟁 영웅인 펠트 파켓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 기리는 미국의 태도를 한국정부는 배워야 한다. 군통수권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지난 달 미국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의사상 처음으로 외국 정상이 참석할 가운데 미국 최고 등급 훈장이 수여할 수 여식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6·25전쟁 영웅인 펠트 파켓 주니어 예비역 미 육군 대령 일가족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6·25 영웅 앞에서 韓美 대통령이 무릎 꿇은 것은 우리 시외의 현충일 기념 태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국과 자유를 지켜낸 군인은 존중받아야 한다. 저번 한미정상회담의 시작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의 한국인 용사 표창처럼 국가 우대를 본받아야 한다. 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한국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준 참전 용사들 덕에 폐하에서 일어나 오늘을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미국에 감사를 표했고 영웅 앞에서 무릎을 꿇어 예를 표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현충일에 6·25와 전평인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충일에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칭송하기도 했다. 현충일 폭침 주범인 김영철을 불러 국민 대접했다. 천안함 유족을 초청한 자리에선 김정은과 손잡고 찍은 사진 책자를 나눠줬다. 이달 6·25전쟁 73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지난날 미국 병분 시 보여준 기념사와 같은 말, 같은 행동을 볼 수 있을 바린다.

6. 문재인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내용을 분명하게 인정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아끼된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발족되었고,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이 사건이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여 천안함 침몰이 명백한 북한의 불법적인 전쟁행위라고 국제적으로 판결한 사건이다.

하지만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 일부가 다른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군사사고조사규명위원회(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는 인사의 진정에 따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재조사하는 행위는 천안함 용사들의 숭고한 죽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 될 잘못된 행위임을 살피는 것은 천명하며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재조사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도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그 원인의 제공자인 북한에게 한 번도 단호한 태도로 경고하거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국민 모두를 위한 통합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을 버렸기 때문임을 우리는 강력하게 지적하며 잘못된 국가 지도를 올바르게 시정해 줄 것

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금 정부의 천안함 전사자 사망원인 재조사 시도는 천안함에 순직한 용사들과 그분들의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부끄러운 일이며 상처받은 유가족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며 힘을 강력히 지적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세워진 자유민주국가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균형과 통합의 정치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7.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을 혼동하는 정부는 자유민주를 위해 파출된 장병의 죽음을 욕되게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묘지에 잠들어 있는 순국 국군들의 애국적인 죽음을 회생으로 하여 세우졌다. 국가와 정부는 국가의 정체성, 자유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현충일 다시 되새겨야 한다. 청와대가 앞장 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낸 정부의 진실·회개위는 국군과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집요하게 들춰내고 있다. 80% 이상이 국군·미군·경찰을 가해자로 다룬다. 반면 북한군의 잔혹 행위는 거론하려 들지 않는다. 재직된 청와대는 천안함·연평도 유족을 불러놓고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손을 맞잡은 사진 책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한 참사는 충격을 받아 읊이 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일에 6·25 남침 공로로 북한 훈장까지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인 것처럼 칭송했다. 문 정부 광복회장은 6·25 영웅 백선열 장군의 현충일 인장을 가로막기도 했다. 급기야 '중공군 피해' 운운하며 국군 포로의 상자에 소금까지 뿌린다. 국가를 이끄는 정부가 과연 자유민주 정부인가 의심이 들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중립주의적 국정 운영에서 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라. 정권은 한시적이나 자유민주대한민국은 지속적이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6일
 신통을 꿈꾸는 나비행동